

광주지방법원 '시민 토크 콘서트'

사법신뢰 거침없는 공방... '民·法 거리 좁히기'

유전무죄·전관예우 등 주제
40여명 2시간 격정토론 펼쳐
국민참여재판 모두 신뢰



광주지방법원이 17일 법원 대회의실에서 '시민사법참여단원의 날' 행사로 시민과 토크 콘서트를 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실인가’, ‘전관 예우는 정말 있나’, ‘국민참여재판 필요한가’

17일 오후 4시 광주지방법원 6층 대강당. 판사와 변호사, 시민사법참여단 40여명이 ‘사법 신뢰’에 대해 거침없는 얘기를 토론했다.

‘시민과 토크 콘서트’는 김동욱 광주지법 공보관사의 사회로 공동현 판사, 이민아 변호사, 시민 최정례(여·58·자영업)·조연주(조산대 행정복지학부 4년)씨 등 4명이 패널로 참여했다. 또 방청석에는 40여명의 시민사법참여단원이 스스로의 의견을 내었다. 토크 콘서트는 ‘신속재판 대 총심심리’,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참여재판’을 주제로 2시간동안 진행됐다.

대다수 시민들은 재판기간에 대해 ‘너무 길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3심까지 간다면 1년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한달에 한번 열리는 재판을 2주에 한번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사 사건의 경우 재판기간이 길어지면서 비용은 물론 미움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소송 경험이 있는 한 시민은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5년이 걸렸다. 그 과정에서 감정만 쌓여갔다”며 “재판기간을 한 달에 한번 할 것이 아니라 더 자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 수를 늘려

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뜨거운 감자인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판사와 시민간 인식차가 컸다. 시민들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고, 판사는 단호하게 없다고 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시각도 마찬가지로 엇갈렸다. 이 두 문제는 연관성이 크다고 인식했다.

한 시민은 “경제사범인 A회장은 고위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정에서 나오면, 곧바로 보석으로 풀려난다”며 “이를 보고 어떻게 전관예우가 없다고 하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다른 시민은 “승산이 높은 까닭에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도 전관을 찾는 것 아니겠

는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동현 판사는 “전관예우는 없다”며 한 가지 사례를 들었다. 퇴임한 한 대법관은 판결문 첫 장을 쓴 적이 없다는 것이다. 첫 장에 변호인 성명이 나오는 까닭에 사무관에게 맡겼고, 자신은 주문과 이유만 썼다는 것이다. 공 판사는 “왜곡된 변호사장이 전관예우를 믿게 하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토론이 뜨거워지자 사회를 맡은 김동욱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든 하지 않든간에 재판 결과는 똑 같아야 하는가”라고 질문한 뒤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모

든 국민은 판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달라는 요구하지만, 민사 재판에서 판사는 본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며 “안타깝지만 심판이 재판장이 혼수를 돌 수는 없다”고 토론했다.

이민아 변호사는 “전관이 모든 사건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다”며 “전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건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가족같이 맡아주는 변호사가 훨씬 승산이 있다”고 조언했다.

참여재판에 대해서는 판사·변호사·시민 모두 신뢰를 보였다.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담해진 ‘보이스피싱’

“금융정보 유출됐다” 돈 찾게 해놓고 아파트 침입해 훔쳐

광주·전남서 한달새 1억 피해

예금을 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하게 한 뒤 집에 침입해 돈을 훔쳐 달아나는 형태의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 달 사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4건의 신종 범죄에서 1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의 개인정보가 다수 유출됐거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오후 1시 35분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김모(여·67)씨의 집에서 현금 1550만원이 도난당한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 가량 우체국 직원, 경찰을 사칭한 남성들로부터 “금융정보가 유출돼 은행예금이 안전하지 않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남성들이 시키는 대로 예금 1550만원을 찾아 집안 장롱에 보관하고 낮 12시 18분께 집에서 14km 떨어진 광산경찰서로 이동했다.

김씨는 경찰서 로비에서 30여분간 전화 한 남성을 기다리다 뒤늦게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집에 숨겨둔 현금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12일 오후 6시10분께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에서도 김모(여·83)씨가 냉장고 안에 넣어둔 현금 3000만원을 도난당했다.

김씨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돼 금융자산이 위협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예금 3000만원을 찾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같은 수법에 당했다. 지난 11일에는 광주시 북구 매곡동에서 50대 여성이 4000만원을 비슷한 과정을 거치는 수법으로 도난당했고, 10일에는 전남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3000만원을 도난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는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이 만들어낸 신종 수법으로 최근 전국에서 100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찰로서는 검거에 총력을 다하겠지만 시민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장흥 체험랜드’ 수사, 전남경찰청이 맡는다

경찰이 보조급 전용 의혹(광주일보 10월 28일자 6면)이 제기된 ‘장흥 사상의학 체험랜드’ 사건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애초 보조급 사업이 진행된 장흥경찰에 배당했던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로 재배당하면서 사상의학 체험랜드 조성 사업을 추진했던 전남도, 장흥군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1월 초 장흥경찰에 배당했던 보조급 비리 의혹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로 재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요의를 받은 전남지방경찰청은 장흥경찰에 사건을 넘겨 자칫 수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사건 발생 지역인데다

수사 인력이 4명인 상황에서 전남도, 장흥군 고위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보조급 집행 비리의 전모를 파헤치는 것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전남지방경찰청은 사건 배당 2주 만인 지난 16일 돌연, 장흥경찰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은 뒤 수사인력이 10여명에 달하는 지능범죄수사대로 넘기는 등 수사 기류에 갑작스런 변화가 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가 많고 사안 자체가 엄중하다는 판단 때문에 보다 수사 인력이 풍부한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이라며 “관련 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뒤 관련자를 소환,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폭발물이다” 발각 뒤집힌 광주송정역

대합실에서 의심물 오인신고
KTX 중단·승객 대피 소동

파리 연쇄 테러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광주송정역 대합실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오인 신고가 접수돼 KTX 운행이 일시 중단되고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7일 광주광역시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7분께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역 사 대합실 장병 사무실(TMO) 앞에 ‘훈련용 폭발물’이라고 쓰인 물체가 놓여있는 것을 역무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코레일 광주본부에 실제 폭발물질이 들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대합실에 있던 승객 50여명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이로 인해 용산역을 출발해 광주송정역에 10시 37분에 도착 예정이었던 KTX 509호의 도착이 4분가량 지연됐고 오전 10시 45분 광주송정역에서 용산역으로 출발 예정이던 새마을호 1102호 역시 5분가량 지연됐다. 경찰 확인 결과 상자 안에는 신문지가 들어 있었을 뿐 실제 폭발물은 아니었다. 경찰은 군이 대테러훈련을 하면서 사용한 훈련용 모의 폭발물을 수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10시 50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천동 재개발’ 법적분쟁 휘말리나

주민 찬반 갈등을 겪어온 광주 광천동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전망이다.

광천동 재개발 사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회)는 20일까지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비대위는 또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낼 계획이다.

비대위는 “주민동의서를 검토한 결과 수백 장의 서류가 조작됐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광천동 재개발 사업은 전체 조합원 2365명 중 75%에 해당하는 1773명 이상의 동

의를 얻어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 7월6일 230명분의 동의서를 얻지 못해 구청 측으로부터 조합 설립 신청을 반려당한 뒤 8월17일 1775명의 동의를 얻어 조합 인가를 재신청했다.

비대위는 조합인가 재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동의서가 조작되거나 허위로 작성됐으며 조합설립을 승인한 구청도 이를 묵인했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청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지만 현재까지 동의서를 검토한 결과 결격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SNS ‘묻지마’ 폭행 ... 알고보니 “짜러냈다” 시비 쌍방폭행



○...아무런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SNS에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동정 등이 잇따랐지만 서로 ‘짜러냈다’며 시비대 쌍방 폭행한 사건인 것으로 확인돼 해당.

○...1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3)씨 등 2명은 지난달 25일 오전 6시17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포장마차 앞에

서 윤모(여·28)씨와 홍모(28)씨를 수차례 때려 각각 8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공동상해).

○...경찰 관계자는 “‘기본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결국 양측의 주먹다짐으로 이어진 사건”이라며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며 누리꾼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하던 SNS 내용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곡성, 전원주택

- 곡성군 입면 송전리 233-6번지
- 대지 72평, 건물 28평, 시멘트 벽돌조
- 1층 단독주택, 2012년 준공, 텃밭있음
- 광주에서 30분 / 금호타이어에서 1분
- 매매-6500만원

화순, 전원주택부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 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12월말 완공)
- 매매-1억6400만원(조정가)

수기동, 오피스텔

- 16층, 29평, 광주천 방향
- 전채수리, 주거겸 사무실, 대형주차장
- 매매-5500만원(일시불조건)
- 보5천만원에 월35만원 포함
- 용자 3천만원 가능

싸고 좋은 물건, 추천합니다!

주인직거래 H.010-6839-5900

해남, 전원주택

- 해남군 북평면 오산리 987-3번지
- 건물 28평(실평), 대지 53평(지분)
- 1층 단독주택, 2013년 10월 준공
- 2차선 도로접, 저운창고, 판매시설
- 매매-6500만원

금호리조트/회원권

- 법인, 등기제, 35평, 연 30박
- 분양가 3500만원
- 화순 / 제주 / 충무 / 설악
- 아산스파 / 금호패밀랜드 공유
- 매매 - 2500만원

금호동, 근린상가

- 서구 금호동 243-6, 과거 7080자리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701호, 120평, 전망최고
- 매매-6억 5천만원(용3억6천 있음)
- 보5천만원에 월 250만원 포함

투자자모임

- ▶ 투자 하실분 / 공동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 돈 빌려 주실분 / 제1순위 근저당 설정 연 10% 이자 지급
- ▶ 사무실 같이 쓰실분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